

글로벌로지로서의 한국학의 (불)가능성

Paik Young-seo,
Yeonsei University

1. 머리말

베트남과 한국의 학자들이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서울로부터 비행기로 다섯 시간 걸려 도착할 수 있는 장소에 위치한 하노이에서 두 나라의 학자들이 모여 한국학에 대해 논의하는 이 회의는 일차적으로 양측 참가자 모두에게 서로가 수행하는 한국학을 안과 밖에서 동시에 바라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장소’(place)에 대해 특별히 깨닫는 기회가 마련될 수도 있다. 베트남과 한국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두 나라가 식민지 지배, 분단, 전쟁, 빈곤 그리고 최근에는 급속한 경제발전을 경험했다는 공통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나는 이와 더불어 두 나라가 차지하는 공간적 위치를 강조하고 싶다. 한국과 베트남은 과거 동아시아(당시로서는 사실상 세계) 문명의 표준이자 ‘중심’이었던 중국으로부터 비슷한 거리를 가진 ‘주변’---더 정확히 말하면 소중심---적 존재였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세계질서와 전지구적 문화의 ‘중심’인 미국으로부터 한국과 베트남이 모두 ‘주변’적 위치에 있다. 이러한 공간적 위치는 과거와 현재의 두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론이고 두 나라의 미래를 예상하는 데서도 핵심적인 요소라고 본다.

그렇다면 주변적 존재라는 장소에 대한 문제의식은 오늘의 주제인 한국학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최근 한국에서는 한국학의 ‘세계화’ 내지 ‘국제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그 방안으로 해외 한국학의 양적·질적 성장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한국 안의 관련 연구성과가 해외에서 널리 인정받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의 기저에 한국학의 주변성에 대한 열등감이 깔려 있지 않은지,

그래서 한국학의 장소성을 일종의 굴레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나는 한국학의 세계화라는 구호에 집착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로 한국학의 장소성을 강조하려고 한다. 장소를 갖는, 그러나 특수한 것에 매어있지 않은 한국학을 추구하자고 제안하는 것이다.

그 길은 한국학에서 생산된 지식이 보편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서구 중심의 보편주의를 비판하는 동시에 한국이란 장소를 중시하면서도 특수성에 매몰되지 않고 보편성을 추구하는 이중의 과제를 감당하는 학문의 길이 곧 새로운 한국학이 가야 할 길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한국이 처한 공간적 위치에 대한 각성을 통해 기존의 서구 중심의 지식구조를 재구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본다. 바로 이런 문제의식에서 ‘지구지역학(Glocalogy)으로서의 한국학의 재구성’이란 프로젝트를 시도해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 한국학의 진정한 세계화의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과 유사한 주변적 위치란 장소성을 가진 베트남 학자들과의 이번 만남이야말로 ‘지구지역학으로서 한국학’의 불가능성과 가능성을 따져묻는 더없이 적절한 기회라 하겠다.

2. 안과 밖에서 본 한국학의 정체성

‘지구지역학으로서 한국학’이 무엇이고 그것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를 논의하기에 앞서, 한국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기왕의 논의를 간단하게나마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한국학이란 한국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생산(곧 연구)하고 유통(곧 교육)하는 학술이라고 말한다면, 한국과 베트남은 물론이고 전세계의 한국학 종사자들도 대체로 동의할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자국을 연구하는 학문인 한국학은 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학이 ‘국학’ 또는 ‘민족학’이라고도 불리는 경우가 있듯이, 그것은 민족주의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한국학이 민족주의를 이념적 기반으로 삼게 된 경위는 그 역사적 연원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지금 한국에서 수행되는 한국학에는 조선학(또는 국학)의 전통과 지역학으로서의 ‘Korean studies’라는 두 개의 흐름이 겹쳐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선학이란 일제시대의 경성(京城)제국대학에서 ‘제국의 지식’으로 추구된 조선학이라는 제도적 학문과 이에 대응한 제도 밖의

‘조선학운동’을 모두 아우른다. 그런데 오늘의 한국학은 특히 후자인 ‘조선학운동’ 즉 한민족의 위기에 대응해 성립한 학술운동에서 그 정통성의 유래를 찾는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학이 ‘Korean studies’로만 환원될 수 없다. (그 영문 명칭은 다 같지만) ‘국학’(예컨대 연세대 국학연구원) 또는 ‘민족학’(예컨대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이라는 명칭이 한국학과 병용되는 관행이 여전히 살아 있는 이유이다.

조선학운동에서 연원을 갖는 한국학의 역사적 맥락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에서 좀더 깊이 논의한 바 있는데, 그 핵심인 세 가지 특징은 우리가 한국학의 정체성을 논함에 있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요소들이다. 첫째, 한국학은 주체성과 실천성을 표방한 조선학운동이 저항적 민족주의에 근거하였듯이 민족주의와 연관이 깊다. 둘째, 한국학은 조선 문화의 총체성을 탐구하기 위해 여러 분과학문의 연구자들이 협력한 통합적 학술운동으로서 그 성과를 축적해왔다. 셋째, 한국학은 서구에서 기원한 학술제도를 변용한 일본의 과학적 학술의 압도적인 우세 속에서 자기보호적 성격을 강하게 띠는 일종의 생존전략으로 출발하였다. 따라서 태생적으로 (소극적이긴 하나) 국제적 경쟁을 시야를 담은 것이다.

물론 21세기에 들어선 오늘날의 한국에서 위와 같은 한국학의 특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는 않다.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된 1945년 이래 지금까지 한국학의 주된 연구와 교육은 대학의 각 분과학문에서 분화된 채 수행되어온 것이 사실이고, 그 본래의 통합학문적 성격은 대학의 연구소에서나 유지될 뿐이다. 한국학의 또다른 특징인 ‘일종의 생존전략으로서 자기보호적 성격이 강한’ 세계적 시야는 해방 이후 민족주의가 극성한 사회문화적 분위기 속에서 별로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다가 세계화가 슬로건이 된 1990년대 이후 인문사회과학의 영역 가운데 한국학이 상대적으로 국제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분위기 속에서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학의 첫 번째 특징, 즉 한국학이 민족주의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은 해방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어 왔지만, 이제는 논란의 표적이 된 실정이다.

그 논의 과정에서 나타난 하나의 입장은, 한국학이 민족주의를 비롯한 일체의 이데올로기와 단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입장에서 보면, 한국에서의 한국학이 민족주의 등의 이데올로기에 얽매어 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질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한 데 비해, 민족주의로부터 자유로운 구미학계의 한국학 성과가 오히려 더 괄목할 만한 것이다. 이같은 시각은 한국학 연구자에게 자신의 학문 자세를 새삼 돌아보게

하는 효과가 있지만, 위에서 본 한국학의 역사적 맥락을 무시한 것임은 두말 할 필요가 없겠다.

또다른 입장은 한국에서 곧잘 거론되는 ‘열린 민족주의’의 시각에서 한국학을 해석하는 것이다. 그것은 일제 시대라는 엄중한 민족위기의 상황에서의 학문적 대응이 ‘조선학’을 낳았다는 역사적 맥락을 중시하면서도 전지구화가 진행되는 현재의 상황에 맞춰 한국학을 (재)구성하려는 시도라 하겠다. 이것은 종래의 민족주의에 얽매인 (한)국학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성찰적인 입장을 견지하려는 자세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열린 민족주의’란 것의 ‘열린’ 정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적극적인 대안으로 새로운 한국학의 이념 지향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 의도와 달리) 민족주의의 틀 속으로 되돌아갈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것이 한국 안에서의 한국학이 직면한 상황이라면, 그 바깥에서 수행되는 한국학은 어떤 처지에 놓여 있을까. 물론 해외의 한국학이라 해도 각각 처한 국가에 따라 형편이 다르기는 하겠지만, 외국에 대해 연구하고 교육하는 지역학(대개 동아시아학)의 일부로서 대학 안에 자리잡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분과학문보다는 통합학문적인 성격이 강하다. 또한 한국에서와 달리 (자국학이 아닌) 외국학으로서 한국학을 수행하므로 그 이념적 기반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

이같은 특징들은 베트남의 한국학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베트남에서의 한국학은 1992년 한국과 베트남이 맺은 국교정상화에 힘입어 1993년 하노이국립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 동방학부에 한국학이 설치된 이래 발전해왔다. 2007년 현재 한국어 및 한국학 교육기관은 전국에 9곳이 존재한다. 그중 하노이국립대학교, 호찌민시 국립대학교 및 홍방대학교에서만 한국학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그 나머지 기관은 한국어 중심으로 교육한다. 이런 사실은 베트남의 한국학이 상대적으로 한국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생산(즉 연구)보다는 유통(즉 교육)에 치중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 이유는, “현재 베트남에서의 대부분 한국학 교육기관이 한국 회사의 수요에 부응해 통역자와 번역자를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 한국학에 관한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그다지 관심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자체 평가된다. 이렇게 한국학의 단기적인 실용성이 중시되는 여건에서는 민족주의와 같은 이념적 지향이 중시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또한 한국학의 국제경쟁력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단계도 아닌 듯하다.

다른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역학인 동아시아학과와 일부로 자리잡은 미국의 한국학은 주로 한국에서 제공된 해외재원을 활용하고, 점차 증가하는 한국인 유학생과 디아스포라 한국인 학생들이 한국어 및 한국 문화의 수업을 강하게 요구한 덕에 크게 발전해왔다. 그 밖의 또다른 특징은 민족주의와의 거리두기를 의식적으로 강조하는 것이다. 즉 한국 학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민족주의적 연구 자세를 노골적으로 비판하거나, 한국의 민족주의 자체를 연구대상으로 삼음으로써, 그러한 민족주의적 연구로부터 거리를 두는 경향이 주류를 이룬다. 그런데 미국의 한국학이 미국 대학에서 주변부에 속하는 동아시아학과 안에서도 또 주변부, 즉 ‘이중으로 주변화된 위치’에 처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한국학이 “대학에서의 연구에 활기를 불어넣는 보다 폭넓은 지적 경향들 및 질문들과 동떨어져” ‘무관련성’(irrelevance)의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의 한국학이 비록 (한국의) 민족주의와 거리두기에는 성공했지만, 미국 학계의 중심적 지적 경향이나 사회 현실에는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 같다.

여기까지 살펴본 한국학의 특징들을 그 이념적 지향에 초점을 맞춰 다시 정리해본다면, 한국의 경우 민족주의를 둘러싸고 논쟁을 벌이고 있고, 베트남에서는 단기적 실용성에 치중하며, 미국에서는 한국학의 ‘무관련성’이 문제시되는 차이를 드러낸다. 그러나 모두 그 나름으로 각각의 사회적 요구나 학계의 주요 지적 흐름에 대응하고 있거나 대응하려고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단지 그 대응의 효과가 단기적으로 드러나는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드러나기를 기대하는지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다. 어쨌든 지금 한국 안팎의 한국학 모두는 새로운 정체성을 모색하는 단계에 와 있는 것 같다. 나는 한국학이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지적 자극을 주려는 뜻에서 ‘지구지역학으로서의 한국학’을 구상해 보았다.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겠다.

3. 지구지역학으로서의 한국학

아주 생소한 신조어인 지구지역학(Glocalology)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보다 덜 생소한 글로컬리즘(glocalism)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글로컬리즘은 글로벌리즘(globalism)과 로컬리즘(localism)의 합성어이다. 이 합성어는 1990년대 초부터 쓰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think globally, act locally)”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는 개인·집단·단위·조직 등을 의미한다. 그것이 다양한 용법으로 여러 영역에서 쓰이고 있지만, 여기서는 지역(local)에서 전지구(global)에 이르는 공간성의 다양한 규모(scale)를 연결시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인간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규정하면 족하지 싶다. 달리 말하면, 지방적인 것(local)과 지역적인 것(regional)과 전지구적인 것(global), 또는 미시적인 것(micro)과 중간적인 것(meso)과 거시적인 것(macro)을 하나의 차원으로 결합하는 사고와 행동이라고 이해하려고 한다.

나는 글로컬리즘에 입각해 수행하는 학문을 글로컬로지(Glocalogy)라고 이름붙인 바 있다. 같은 한자권인 중국에서는 글로컬리즘을 ‘전구본토화(全球本土化)’라 번역하고, 일본에서는 영어 발음 그대로 표기하는데, 이를 우리 말로 옮기면 ‘지구지역화’ 정도가 될 것이니 그에 따라 글로컬로지를 일단 ‘지구지역학’으로 불러도 되지 않을까 한다. 그 핵심은 전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에 뿌리내린 학문, 또는 지방적인 것과 지역적인 것과 전지구적인 것을 하나의 차원에서 결합해 분석하는 학문이 될 터이다.

그런데 낯선 용어인 이 지구지역학을 한국학과 연관시킨다는 것은 또 어떤 뜻인가? 한국학은 잘 아다시피 한국이라는 하나의 국가/민족(nation)을 분석단위로 한 학문이다. 그런데 현재 한국학은 내적 모순에 직면해 있다. 한편으로는 그 학문적 작업을 제한하는 국가/민족이란 틀에 대해 비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민족에 기반한 한국학이라는 분야를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긴장 속에 처해 있는 것이다.

바로 이 모순으로부터의 탈출구로서 내가 착안한 것이 한국학을 지구지역학으로 재구성하자는 구상이다. 그것은 하나의 시각이자 방법인 동시에 연구영역을 규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지구지역학을 통해 한편으로 서구 중심의 보편주의를 비판하고, 다른 한편으로 한국이란 공간성을 중시하면서도 특수성에 매몰되지 않고 보편성을 추구하는 학문의 길을 한국학이 추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바로 이 길은, ‘유럽적 보편주의’를 극복하고 ‘보편적(즉 지구적) 보편주의’를 수립하자는 월러스틴(I. Wallerstein)의 제안과도 통한다.

우리는 일종의 끊임없는 변증법적 교환 속에서 우리의 특수한 것을 보편화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보편적인 것을 특수화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종합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we are required to universalize our particulars and particularize our universals simultaneously and in a kind of constant dialectical exchange, which allows us to find new syntheses. 그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단지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특수한 것을 보편화’하는 일에 착수하면서 새로운 종합에 도달하자는 게 내가 말하는 지구지역학의 당면 과제이다.

물론 이 새로운 구상에는 아직 느슨한 구석이 많다. 앞으로 한층 더 다듬어야 그만큼 더 설득력 있는 제안이 될 것이다. 여기서는 그것이 안고 있는 몇가지 문제점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지구지역학의 성격을 구체화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 지구지역학으로서의 한국학이라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한국학인 한, 한국이란 공간성을 강조하다보면 특수성에 매몰될 위험은 남아 있다. 이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특수성 또는 구체성을 보편적으로 독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사회학자 조희연이 말한 ‘보편적 독해’란 발상은 나의 논의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그는 “우리의 특수한 쟁점들과 다른 많은 국민국가들의 특수한 사례들을 관통하는 보편적 측면을 통찰하는 노력” 속에서 “우리의 특수한 이슈 속에 내재한 아시아가 공감하는, 세계가 공감하는 보편적 메시지가 전유(專有)될 것”으로 기대한다. 예를 들면 ‘중군위안부문제’나 1980년 5월의 ‘광주학살’과 같은 개별적이고 특수한 사례들을 ‘제국주의, 국가폭력, 전쟁과 결합된 성폭력’이나 ‘국가권력에 의한 집단적 학살행위’와 같은 좀 더 추상적인 범주로 바꿔 읽는 이른바 ‘보편적 독해’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나는 그가 말하는 ‘보편적 독해’의 근거를 ‘소통적 보편성(communicative universality)’이란 발상을 통해 설명해본 바 있다. 사실상 현실 속에서는 소통적이지 않은 (따라서 억압적이고 패권적인) 보편성(uncommunicative universality), 아니면 소통적인 개별성(communicative individuality)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우리는 더 자주 대한다. 어떻게 이를 극복하고 소통적 보편성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해, 개체 안에 소통을 가능케 하는 보편적 요소가 있고 그래서 개체간의 소통 과정에서 생기는 공감과 상상력의 탄력에 힘입어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필자는 답한다. 각각의 문맥에 있는 개별성과 상호이해의 가능성을 부여하는 보편성이 ‘소통적 보편성’의 핵심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보편성은 진리라기보다 널리 인정되고 합의된 것이다. 때문에 합의를 얻기 위한 다수의 인정과 승인이 필수적이고 인식 주체간의 소통이 그 전제가 된다.

두 번째로, 서구이론에 매몰당할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지구지역학의 실현가능성은 희박해진다. 서구이론에서 벗어나려면 궁극적으로 그 기반인 ‘유럽적 보편주의’를 극복하고 그에 기반한 지식구조의 이념과 제도를 재구성할 가능성을 보여줘야만 한다. 윌러스틴은 유럽적 보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보편적 보편주의의 네트워크와 유사한 다수의 보편주의들 a multiplicity of universalism that would resemble a network of universal universalism”(145면)의 존재에서 찾는다. 나는 이 발표에서 강조하는 지구지역학이 ‘소통적 보편성’을 추구하는 한은 그가 말하는 ‘보편적 보편주의’를 구현하는 구상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윌러스틴은 ‘보편적 보편주의’는 “더 이상 주는 것이 서구가 아니고 받는 것이 나머지 세계가 아닌 세계에 도달하는 것 to arrive at a world where it was no longer the West that was giving and the rest that were receiving”, 즉 우리 모두가 주고 모두가 받는 ‘만남의 장소(rendez-vous du donner et du recevoir)’라고 주장한다.(139, 146면)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구지역학으로서의 한국학이 세계에 대해 무엇을 줄 수 있는가가 중요해진다. 그래서 아래에서는 두 곳의 장소에 기반한 지역학에서의 발신을 지구지역학의 징후로서 제시하려고 한다.

4. 지구지역학의 징후: 전지구적 사고와 지역적 실천의 사례

지구지역학에서 말하는 ‘지역’이란 단어는 한국어 용례상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흔히 중앙과 대비되는 지방(local)으로서의 지역과 국민국가를 넘어선 지역(중국어의 ‘區域’, region)의 의미가 중첩되어 쓰인다. 지방적인 것(local)과 지역적인 것(regional)과 전지구적인 것(global)을 하나의 차원에서 파악하되 지방적인 것과 지역적인 것이 지구화에 작용하는 측면을 우선적으로 중시하는 지구지역학에서는 이렇게 이중적 의미를 갖는 ‘지역’이란 용어가 아주 유용하다. 따라서 두 가지 의미의 지역 모두에서 지구지역학의 징후를 발견해야겠지만, 이

발표에서는 지방(local)으로서의 지역에 해당하는 두 가지 사례를 예시하는 데 그친다.

전지구화시대에 지구화와 지역화의 (역설적) 관계를 동시에 파악하고자 할 때 우리가 쉽게 떠올리게 되는 것은, 지역적인 것이 곧 세계적인 것이라는 관점, 아니면 세계적인 것이 곧 지역적인 것이라는 관점이 아닐까 싶다. 전자가 ‘한국적인 것이 곧 세계적인 것’이란 식으로 보는 태도라면, 후자는 세계 수준에서 인정 받은 것이 국내로 역류해들어오면 그것을 새삼 한국적인 것으로 ‘발견’하려는 태도이다. 이에 비해 필자가 지구지역학의 증후로 소개하려는 사례는, 국경을 넘어 소통을 가능케 하는 보편적 요소를 지역 안에서 찾는다는 특징을 갖는다. 먼저 한국의 사례를 소개해보겠다.

한국에서 민주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그 덕에 지역문화 사업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지역문화가 활성화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문화의 민주화’는커녕 지역의 유력인사(지역 토호세력)를 정당화시키거나 의미없는 ‘전통’을 고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지역을 새로운 문화 창출의 거점, 더 나아가 새로운 학문의 거점으로 삼으려는 시도도 나타나고 있다. 인천학(Inchonology)은 그 하나의 사례라 하겠다.

서울에서 전동차로 한 시간이면 도착하는 서해안의 항구도시 인천은 한국 근대사의 여정 속에서 개항장으로 유명한 곳이다. 그곳 주민들의 경험세계를 학문적 탐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로 인천학이다. 인천학은 향토주의(nativism) 또는 지방주의(localism)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도시(cosmopolis)의 전망을 내다보면서 오늘의 인천에 걸맞은 중간단계로서 지역주의(regionalism)에 착안한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동아시아를 하나의 통합적 사유단위로 설정하는 지역주의를 축으로 인천과 동아시아 항구들을 하나로 연결하여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가능해진 것은 지구화의 물결 속에 국민국가의 경계 안팎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그 밖에서는 지역화가 그 안에서는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다. “이 변화의 바람을 자상히 독해하면서” ‘다중적 정체성의 인천학 또는 비판적 지역주의로서의 인천학’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것이 아직은 선언의 단계에 있다. 앞으로 축적될 성과가 그 의도대로 비판적 인천학을 뒷받침하고 더 나아가 (내가

말하는) 지구지역학의 가능성을 보여줄지, 아니면 향토주의나 지방주의로 후퇴해 지구지역학의 불가능성을 보여줄지 예의주시하는 중이다. 또 하나의 증후는 대만(즉 중화민국) 본섬에서도 비행기로 한 시간 가량 더 가야 도착할 수 있는 금문도에 기반한 금문학(金門學, Quemology)이다. 금문학은 금문도 주민들의 경험세계를 지적 탐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대만에서도 민주화의 발전과 더불어 지방자치가 정착하면서 지방문화가 활기를 띠고 있다. 그 덕에 지방별 학문이 유행하여 지방 이름을 딴 각종 학문---대북학(臺北學), 팽호학(澎湖學), 금문학 등---이 출현하였다. 물론 그들 대부분은 지방정부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아 그 사회와 문화가 지닌 특수성을 탐구하거나 그곳과 다른 곳과의 차이를 강조하며 저마다의 지역적 정체성을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금문학의 경우, 금문이 해온 성찰적 역할(reflexive role)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지구지역학의 짝으로 간주된다.

금문도는 지리상으로는 중국 대륙의 샤먼(廈門)에 더 가깝다. 그곳은 역사적으로 초국경적 지역문화의 요충이었다. 청조 때부터 동남아 등지의 화교의 배출지이자 중계지였고, 복건(閩南) 지역 문화의 핵심고리였다. 금문도가 대만의 중화민국 영토로 들어간 것은 1950년대 들어와서이다. 청조가 아편전쟁에 패배해 대만을 일본에 넘겨줬을 때도 금문도는 여전히 청조에 속했다. 그런데 갑자기 국경선을 획정하는 전투가 1949년 이후 공산당과 국민당 사이에서 벌어졌고 그 결과로 금문도는 샤먼 지역에서 단절된 채 대만의 중화민국 영토로 귀속되어버린 것이다.

이같은 곡절 많은 역사를 겪어온 금문에 대한 연구는 국경에 갇힌 일국적 시각을 넘어 지역의 시각에서 양안 중국, 더 나아가 동아시아를 새롭게 보는 데 풍부한 암시를 준다. 예컨대 첫째, 청조 이래 화교송금(remittance) 네트워크로 엮여진 민남경제권과 민남문화를 규명하는 데, 둘째 일본제국권을 이해하는 데, 셋째 동아시아의 냉전의 역사를 다시 보는 데, 넷째 대만사를 다시 보는 데, 특히 오늘날 대만에서 주류 담론인 대만독립론을 비판적으로 보고 대만의 정체성 위기를 새롭게 보는 데 아주 유용하다. 그러나 이런 점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금문학 연구자가 벌써 그 연구의 의의를 “지구적인 시야를 갖고 지역적으로 실천 하는 가능성”에서 찾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직은 이런 모색이 지구지역학으로서의 지향을 명료하게 갖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도 그 잠재적 효과는 큰 만큼 앞으로의 역할이 기대된다. 바로 이런 이유로 금문이란 지명에 들어 있는 ‘문(門)’이란 글자의 상징적 의미가 새삼 중요해진다. 그것은 금기와 지역격절의 의미이자 교류의 무한한 가능성을 표현한 것이므로 앞으로 주체적인 ‘금문의 개방’이 대만인을 비롯한 동아시아인에게 더 광범한 세계관을 여는 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기대를 갖고 다시 보면, 현재 금문에 거주하는 145명 정도의 베트남인 여성 결혼이주자들은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 그들을 방문 조사해 아이를 임신하고 낳는 동안에 풍속과 의료, 간호 문제에서 대만인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본 연구결과는 우리를 다문화주의에 대한 새로운 감수성과 이해로 이끈다. 그런데 이런 다문화주의의 사례는 금문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베트남 결혼이주자들은 한국 농촌의 장소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그들은 보수적인 한국의 농촌에 새로운 문화적 변용을 일으키고 있다. 그들은 비록 지리적으로 여러 국가들에 흩어져 지역적으로 생활하고 있지만, 국경을 횡단하며 독자적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고 있지 않은가. 개별 지역을 가로지르면서 소통하고 교류하는 동아시아가 이미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글로벌리즘의 종래의 발상을 뒤집어 “지역적으로 생각하고 지구적으로 행동하는(think locally, act globally)”하는 존재, 즉 트랜스로컬리즘(translocalism)의 주체일지도 모른다. 여기서 지역은 단순한 지리적 의미를 넘어 (중앙과 짝을 이루는 주변으로서의) 문화적 함축의미까지 갖게 된다. 지구지역학이 이같이 확장된 의미의 ‘지역’까지 탐구의 대상으로 포용한다면 한층 더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것이 분명하다.

5. 맺음말

끝으로 지구지역학으로서의 한국학의 제도화 가능성에 대해 전망할 때가 되었다. 먼저, 지구지역학으로서의 한국학이 제도적으로 과감하게 추구해야 할 방향은 한국학과 연계할 수 있는 참여 인력들을 널리 포용하는 것이다. 예컨대, 해외 대학별로 한국학 프로그램의 존재 유무를 따져 협력대상을 고르기 보다는 한국학 전문인력의 양성과 더불어 중국학이나 일본학 및 동남아학의 전문인력과도 제휴하는 ‘전략적 연구제휴망’(strategic research alliance network)을 짜기 위해 단기·중기·장기별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와 관련해 한 베트남 학자가 국제적 베트남 연구자들과 베트남의 한국학 연구자, 그리고 한국/세계의

한국학 연구자들 간의 교류가 한국학 발전에 크게 공헌할 것이라 지적한 점은 경청할 만하다. 그의 지적대로 “국제적 문제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심도있게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지구지역학으로서의 한국학은 통합학문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또하나의 분과학문 영역으로 대학제도 안에 비집고들어가기보다는 대학 내 연구소에서 활성화할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사실 대학 안에서 분과학문제도의 변화를 꾀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더더욱 연구소를 거점으로 한국학의 새로운 정체성을 실험해봐야 한다. 특히 연구소 안에서 여러 전공의 연구자들이 사회의제를 학술의제로 전환하고 그 의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재구성하면서 연구의 집중성과 유기적 연관도를 제고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연구의 주체(subject)와 대상(object)이란 이분법이 프로젝트(project)로서 용해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 점은 한국에서의 한국학이 주체성과 실천성을 강화하는 특성이 있었다는 유산과 맞닿아 있다. 이것이 종래에는 민족주의와 긴밀한 관계를 맺게 만들었지만, 지구지역학으로 재구성된 한국학은 지방적인 것, 지역적인 것 및 전지구적인 것을 하나의 차원으로 결합하는 학문인만큼 그로부터 자유롭다. 이제 한국의 안과 밖에서 수행하는 새로운 한국학은 저마다의 ‘장소를 갖고(take place)’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에서 ‘일어나는(take place)’ 구체적인 상황에 주체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소통적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을 때 주변에 위치한 우리는 모두가 주고 모두가 받는 ‘만남의 장소’에 비로소 설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한국학의 진정한 세계화이다.

지구지역학으로서의 한국학이라는 새 구상이 성취될 가능성이 엿보인다면 자동적으로 혹은 필연적으로 실현될 거라는 보장은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선언하고 제도화할 길을 모색해야 한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서로 만난 것 아닌가.